

자동배송 로봇, 2022년 3월까지 전국에서 공공도로 주행 가능

닛케이 2021.3.22

일본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자동배송 로봇의 공공도로 사용을 인정한다. 소형으로 저속 주행하는 기종에 한정해, 전국에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대책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물류·택배 업계에서의 활용을 상정한다.

현행 제도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공도로의 주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의 통상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 차량법 등의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공공도로 주행은 사람에 의한 원격 조작과 국토교통성 등에 의한 주행 인가를 조건으로 할 방향이다. 자동배송 로봇의 크기 및 주행속도는 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다. 일본 정부가 2020년에 실시한 실증실험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다.

자동배송 로봇의 개발을 다루는 ZMP(도쿄·분쿄)는 공공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EC사이트의 물류 거점이나 슈퍼, 음식점 등에서 배달처까지의 「ラスト 원 마일」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배송의 이용을 전망한다.

일본 우편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 재난으로 높아지는 고객의 비접촉 니즈에 맞는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자동배송 로봇 도입을 일손 부족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성장전략의 하나로 규정한다. 20년의 실증실험에는 일본우편과 미쓰비시상사, 라쿠텐이 참가했고 경제계의 관심도 높다.

EC 사이트의 이용 확대에 따라, 택배하는 집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8년도는 연 43억 개로 10년간에 10억 개 정도 증가했다.

물류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택배 위기」가 일어나면서 배송료 인상도 생겼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수요 증가도 있어 자동배송 로봇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애 맞추어 안전 대책의 검토도 진행한다. 공도에서 사람 또는 차량과 접촉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법적 책임에 대해 정리를 서두른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배송 로봇의 지식은 장래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주행에도 활용한다. 자동 로봇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밀도 향상에 연결하는 방향이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동배송 로봇은 환경 부하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50년까지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동차의 전동화 등에 임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동배송 로봇에 관한 법 정비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 미국은 로봇의 자율주행과 식료품을 가정으로의 배송을 인정하고 있는 주가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신판매 대기업이 배송로봇을 활용한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라는 재난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배송 수단으로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끝.